

‘40년 숙원’ 통합 국립의대 설립 ‘마지막 기회’ 놓치나

목포·순천대, 의대·대학병원 입지 갈등 통합 파행
20일까지 공동계획서 내야...실질 협상시간 촉박
지역사회·민형배 시장 “대승적 통합 결단” 촉구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의과대학 신설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030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양 대학의 합의를 전제로 한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지만,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비시와 양 대학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계획서 제출 기한이 9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 대학은 통합 의대의 입지를 놓고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지역 의대 신설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1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광주가 의대 정원을 확보하려면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에 합의한 뒤 의대와 대학병원의 소재지, 교육·진료 가능 배치 등을 담은 공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대와 대학병원을 어디에 둘 것

인지를 놓고 양 대학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목포대 의과대학 배치·순천대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 설립’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중재안을 거부하고 순천의 대학병원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 협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순천대는 통합대학 본부는 목포에 두되 의대와 대학병원은 순천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 등부권을 넘어 경남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의료벨트를 구축하려면 의대와 대학병원이 순천에 들어서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민 시장 인수위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두고, 순천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우선 건립한 뒤 목포에도 대학병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대 교육 기능은 한쪽 캠퍼스가 본부와 기초의학을 담당하고, 다른 캠퍼스가 임상 이론과 실습을 맡도록 분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목포대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의 순천 배치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민 시장은 지난 2일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 해당 지역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후 양 대학이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갔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민 시장이 요청한 지난 10일까지도 통합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양 대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원이 국회의원회와 강성휘 목포시장, 전

남 서부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은 11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신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오는 20일까지 대학 통합과 의대 신설 방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남은 9일을 모두 협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서에는 의대 신설 필요성과 요청 정원을 비롯해 대학 운영체계, 교육시설, 교육병원 확보 방안, 교수진 구성, 양 캠퍼스의 기능과 역할, 지방정부 지원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대학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배치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계획서 작성이 가능한 만큼 양 대학이 실제 협상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한 내 합의를 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전남광주에 배정하려던 의대 정원을 다른 지

역으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보에 실패할 경우 40년 넘게 이어진 전남 지역의 국립의대 설립 요구가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이유다.

민 시장도 양 대학에 지역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민 시장은 지난 10일 호소문을 통해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특별시민과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한 마음으로 요구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설득해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라며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해 하나의 대학으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제출 시한까지 단 9일 남았다. 의대와 대학병원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양 대학이 극적인 절충안을 마련하느냐가 전남광주 국립의대의 2030년 개교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임이 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반도체·20조 재정 인센티브 국회 협조 절실”

민 시장, 예결위원장 만나
지역 현안·국비사업 건의
영암~광주 고속도로 건설
NPU컴퓨팅센터 지원 요청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았

민형배 특별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지역 핵심 현안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우선 건의했다.

민 시장은 “전날 열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 및 가동을 위해서는 국회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또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원하기로 한 20조원 규모 재정 인센티브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해서는 영암~광주 고속도로 건설, 국가엔피유(NPU)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케이(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인공지능(AI)-콘텐츠 융복합 지원센터 구축, 마른길 집적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1일 서울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통합특별시 핵심 현안 및 27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단지 시범 조성,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활성화, AI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지원, 메가프로젝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자율주행차 전용테크 구축, 광역 생태동물원 조성 등 핵심사업 10건을 집중 건의했다.

민 시장의 이날 국회 방문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전방위적인 국비 확보 활동의 연장선이다.

민 시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주요 핵심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고, 지난 7월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주요 국비사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핵심사업은 전남광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만큼 정부와 국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며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획예산처,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핵심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반도체 부지 광주기지 28년까지 이전”

국방부 “미군 공여지 소속 반환 위해 협의”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대변인은 ‘2028년 중순’ 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장관·차관·합참의장을 비롯한 각급에서 실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광주기지 이전 일정과 방식, 소요 예산 등에 대해 아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 조만간 국민들께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기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Collocated Operating Base) 중 한 곳으로, 유사시에 미군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광주기지 안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도 있는데,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한미군 당국 간 협의도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안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전남광주특별시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공군기지로,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과 서남부 영공방위 임무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T-50 고등훈련기, 국산 경공격기 TA-50 볼록2 등 항공전력이 배치돼 있다.

군은 1전투비행단 예하에 있는 3개 비행대대를 제16전투비행단(예전)과 제20전투비행단(사산), 제19전투비행단(충주) 등 3개 비행단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민석 우세 속 전북 표심 향방 ‘관전 포인트’

▶1면에서 전북의 경우 지역에서 ‘소외론’이 나오는 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친정계인 이원택 지사가 당선됐다는 점 등이 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1위인 김 후보와 2위 정 후보의 차이가 2%p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북의 결과와 관련 포인트를 꼽힌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일정을 수정, 전북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민석은 전북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적 대변자이자 발전의 설계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전북의 민심 다지기도 했다.

3위인 송 후보의 득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선호투표제 규정상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3위 득표자의 2순위 투표까지 집계하게 되는데, 현재 3위인 송 후보를 1순위로 적은 권리당원들이 2순위에 김 후보를 적을 가

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반정(반정정래) 연합 전선을 구축한 송 후보의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 김 후보 측으로 표심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고 있다.

호남에서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서울·경기 순회경선이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서울·경기의 경우 강성 지지층 비율이 높아 정 후보가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호남의 표심이 서울·경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 평가 관계자는 “호남에서의 성적표가 민주당 전당대회와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호남에서 서울·경기 순회경선으로 이어지는 이번 슈퍼워크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버블로 가축분뇨 처리 효율 높인다

자체실험 암모니아 77% 감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악취와 슬러지 고착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이크로버블 기반 폭기 기술의 현장 실증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이 가축분을 적용한 시제품을 제작해 지역 양돈농장 1곳에서 현장 적용성과 처리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마이크로버블은 일반 기포보다 크기가 작아 물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산소 전달 효율이 높은 수처리 기술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하면 미생물 활동에 필요한 산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해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슬러지가 시설 내부에

쌓이거나 굳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농기원에 따르면 2025년 전남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약 638만t에 달한다. 축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농기원은 현장 실증에 앞서 지난해 1차 실험을 진행했다. 마이크로버블 폭기를 적용한 처리조에서는 일반 폭기 방식보다 암모니아 발생량이 약 77% 감소하고 용존산소 전달 효율은 약 8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 실증에서는 실제 양돈농장의 운영 조건에서 슬러지 고착과 악취 저감 효과, 폭기 효율, 시설 운영 안정성 등을 검증한다.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2030년 양산하려면 2028년 선행 작업에 달려

▶1면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자인 무안의 신규 군공항 건설 절차도 서두른다. 임시 배치에 따른 비용과 군 기능 재배치 부담을 줄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새 군공항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과 법령 정비를 지원하고, 주한 미군 시설 이전과 관련한 대미 협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력과 용수 확보 일정도 구체화됐다. 전력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LNG 발전 등을 활용하는 한편 기존 전력망을 산단까지 연결한다.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분기점에서 산단까지 약 23km에 이르는 지중선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용수는 단계적으로 하루 65만t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동북댐과 주암댐을 통해 하루 35만t을 공급하고, 이후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 등을 활용해 하루 30만t을 추가로 확보한다.

정부가 잡은 사실상의 분기점은 2028년이다. 이때까지 산단 관련 행정절차와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군공항 기능 재배치 등 펌 착공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9년 중 반도체 펌 1기를 완공하고, 2030년 상반기까지 각종 인허가와 시설 점검, 시험생산을 거쳐 6월부터 첫 제품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2030년 6월 양산의 성패는 2028년까지 얼마나 많은 선행 작업을 끝내느냐에 달렸다. 기업 유치와 산단 계획 수립, 인허가, 군공항 기능 재배치, 전력·용수 확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연될 경우 펌 착공 이후의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군공항 부지 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 수요를 살펴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서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시설, 물류시설 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클러스터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주변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